##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한반도 다시 긴장 고조

정부, 북 '오물 풍선 살포' 대응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가능해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가동 준비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정지 카드를 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 밝혔다.

이후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 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 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 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 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 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 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 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 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 ·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 적하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 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한 건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심 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시 고정식 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 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짐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 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해진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 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최권일·오광록 기자 cki@kwangju.co.kr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여하느 시

## 광주 구도심 일대 고대 도시 흔적 잇따라 발굴

1994년 10월 광주 북구 누문동에서 통일신라 건물지와 유물이 출토된데 이어 이번에는 광주 동구 남동에서 고려 사찰인 대황사(大皇寺)의 실체를 암시하는 명문 기와편이 발굴됐다. 1998~1999년 광주 지하철공사, 2006년 국립아 시아문화전당 건립 등의 과정에서도 고려·조선 시대 유물들이 다수 출토됐다는 점에서 통일신 라 무진도독성이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광 주 구도심 일대에 고대도시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황사는 그동안 광주읍성 인근에 실존 했던 고려 사찰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위치나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아 이번 발굴이 실체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학계에서는 이번 발굴을 바탕으로 '고대 광주의 역사'를 추적하는 조사·발굴 사업이 전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 동구는 지난달 22일 '매장문화유산 공고'에서 "지난 4~5월 시행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산길 확장 부지인 동구 남동 99-3번지일대 510㎡ 구간 유적 현장조사에서 자기, 기와 등유물 30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출토된 유물은고려시대 청자편 3점,조선시대 백자와 청자편,옹기편 등 9점 등 자기류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기와편 9점,조선시대 기와편 9점 등이다.

지단법인 전남문화유산연구원의 발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물이 발굴된 지역은 고려시대 사찰인 대황사지(11세기 창건 추정) 권역으로 추정된다. 광주읍성(1378년 축성) 성벽 외곽지역이다. 조사 결과 이곳에서는 적심 1기(대형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다짐돌), 수혈유구(땅에 구덩이를 파서 만든 자리로 무덤·주거

북구 누문동에 통일신라 건물 동구 남동에선 고려 사찰 흔적 고려시대 대황사지 또는 다른 사찰 존재 가능성 높아 통일신라 무진도독성 일대 매장 문화유산 다수 존재할 것

지 등의 흔적) 15기, 주공열(기둥 구멍) 1기, 우물 1기가 발굴됐다. 유물은 수혈유구에서 발견됐으며, 사찰 건물에 쓰였음을 뜻하는 한자 만(卍)자(길이 6cm, 너비 4cm) 명문이 새겨진 고려시대 수키와와 암키와가 출토됐다. 명문은 육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없으나 희미한 흔적으로남아 있다.

연구원은 '만'자 기와와 적심·주공열 등 건물 지의 흔적이 발견된 점 등에서 고려시대 대황사 지 또는 다른 사찰과 연관된 시설이 존재했을 가 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측은 "이번에 발굴한 기와는 아직 정확한 위치나 규모를 파악 조차 못한 '대황사지'의 권역을 추정할 수 있는 사료"라고 평가했다.

또 조선시대 유물들이 동시에 발견됐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에도 유적이 추가 조성되거나 폐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인근에서 발견된 우물은 약 3m 깊이만 남아있는데, 주변의 다른 우물들과 달리 축조방법이 조잡하고 벽면이 쉽게 무너져내린다는 점에 비취 근대들어 급하게 조성되고 이후 건물이 들어서면서

폐기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시 동구 광산동 일대는 통일신라시대 무 진도독성부터 고려시대 사찰인 대흥사지와 조 선시대 광주읍성이 있던 곳으로, 대흥사지는 지 금까지도 구체적인 위치 및 범위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추정지만 남아있는 상태다. 고려시대 사 찰 권역은 분포 범위가 상당히 넓고, 특히 광주 동구는 평야 지대라 대황사지의 권역도 상당히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유물 출토지 가 대황사지 권역에 들었을 수 있고, 인근에 다 른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 여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광주시 동구 일대 에 굴착 작업을 거쳐 세운 건물이 많지 않으므 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아직 발굴하지 못한 유적이 다수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득염 전남대 건축학부 석좌교수(전 한국학 호남진흥원장)는 "광주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대 도시인데, 광주학생운동·의병·5·18 등 근현대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고대 시대의역사 발굴에는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발굴을 계기로 사찰과 관아 등 위치를 추정하고 광주 시내 일대의 과거 유적들을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조사지역의 한계가 있어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나 시기에 따른 건물지의 형태나 용도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며 "향후 일대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조사로 성과물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주변의 대황사지나 광주읍성과의 연관성이 확인되고, 역사적인 성격과 의미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국힘, 14개 정책특위 순차 가동…원구성 협상 장기화 대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당 차원의 정책 특별위원회를 조만간 순차적 으로 가동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14개 특위를 먼저 띄워 정책 행 보에 속도를 내고 거대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구 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역별 특위 구성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의 정책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구성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 빠르게 현안을 챙기고, 현장을 가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첫 의원총회에 보고된 특위는 ▲ 저출생 대응 ▲ 민생경제 안정 ▲ 세제 개편 ▲ 연금 개혁 ▲ 인공지능(AI)·반도체 ▲ 에너지 ▲ 의료 개혁 ▲

기후 대응 ▲ 노동 ▲ 공정 언론 ▲ 재난 안전 ▲ 약 자 동행 등 12개다.

여기에 외교·안보와 교육 개혁을 추가한 14개 특위를 출범시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당 총선 공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108명을 상대로 신청받 아 최대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 다

정책 특위를 일제히 가동하는 데는 진척이 없는 원 구성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정책 이슈 를 주도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확립하려는 의도 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종합부동 산세 등 세제 개편 등 각종 민생 이슈에서 발 빠르 게 움직이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에 이 어 정책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모양새라는 비 판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정부와 공조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SALE 5.22 ~ 6.8 70%~50%

변지유 창립 45주년 맞이 감사세일

이월 상품 70~50% 세일 | 신상품 30% (망블라우스 제외)

많은 관심 참여 부탁 드립니다. ☎ 062-222-7205 / 010-9287-7205